

민주노동당(1997-2004)이 추구했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

채진원*

I. 서론

그동안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개혁할 대안정당모델 중의 하나로서 논의된 바 있는, 대중정당모델의 전형으로 진보적 이념정당, 계급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의 실험과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 ‘국민승리 21’이라는 권영길 후보의 선거대책기구로 출범하여 2000년 창당한 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분단체제에 따라 계급적·이념적 사회균열이 봉쇄되고 억제된 한국적 환경에서도, 선진 산업사회의 대중정당처럼 이념적·계급적인 대중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정당사의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었다(김수진 2008, 6).

그러나 이 같은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이후 4년이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극도로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세력이 분당해나감으로써 조직적으로도 위축되었다. 당의 위축은 득표율의 하락세로도 설명된다. 대선별로는 16대 대선에서 3.9%에서 5년 뒤인 17대 대선에서 3.0%로 하락하였으며, 총선별로는 17대 총선에서 13.0%에서 4년 후인 18대 총선에서 5.69%로 거의 50%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별 득표율 현황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되는 노동자 밀집도시인 울산의 경우¹⁾도 17대 총선을 전후로 하여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경희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추세가 의미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17대 총선에서 최고 13%까지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최근 그 지지율이 약 5%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2011년 6월 19일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강령을 삭제하고, 이어서 유시민 대표가 이끄는 자유주의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당과도 합당하였다.

이 같은 지난 10여 년간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성장 및 변화의 모습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대중정당모델을 상정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 이후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의 특성이 점차 약화되거나 심지어 이러한 특성을 포기함으로써 원내정당화가 촉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채진원 2009). 대중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약화의 대표적인 예는 '이념성향의 약화'와 '진성당원제의 약화'이며, '당원에서 차지하는 민주노동조합원 비율의 정체 및 약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다른 대표적인 예는 '공직-당직겸직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원내의원조직의 영향력 증대' 및 '개방형경선제도 도입 논의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 이후 민주노동당의 약화와 의회주의화의 촉진과정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왔던 대중정당모델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함께 보완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외 대중정당모델로 출발한 민주노동당

- 1) 1997년부터 2008년 18대 총선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집산지인 울산지역에서 국민승리 21의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97~2008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정당 득표율 추이(%)

지역 구분	15대 대선 (1997. 12)	지방선거 (정당득표율) (2002. 6)	16대 대선 (2002. 12)	17대 총선 (2004. 4)	지방선거 (정당득표율) (2005. 6)	17대 대선 (2007. 12)	18대 총선 (2008. 4)
울산	6.1	28.7	11.5	21.9	26.8	8.4	14.23

* 출처: 중앙선관위, 각 연도별(1997~2008).

이 2005년 울산복구 재선거 패배이후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경향성이 짙었다. 첫째는 매우 단기적인 시각으로 초창기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원내진출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공요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연구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조돈문(2004)과 정영태(2004a)가 있다. 둘째는 2006년 민주노동당의 쇠퇴과정을 분당에 초점을 맞춰 그 요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연구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김보현(2008)과 김윤철(2010)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향의 연구는 매우 단기적인 시점에서 주요한 정치적 사건사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선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주노동당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설명하거나 최근의 당 정체성의 변화를 평가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노동당의 이념적·조직적 약화 등에 따른 당의 성격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우선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려고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이 만들고자 했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를 문제제기하고 이것을 '대중정당모델'의 관점에 입각하여 경험적인 설명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1997년부터 2005년 울산복구 재선거 이전까지 민주노동당의 대중정당적 특징이 비교적 잘 드러난 만큼, 이 시기에 초점을 맞춰 당 정체성의 형성을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하여 경험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 같은 문제제기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자유주의적 이념성향의 국민참여당과 합당하고 19대 총선결과에서 민주노동당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경남 창원과 울산 북구 등 노동자 지지기반에서 패배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노동당이 지니고 있었던 정체성과 특징이 변화되고 변질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이 어느 쪽에서 와서 어느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제2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비교학적인 분석틀로 대중정당모델의 개념과 특징을 경쟁하는 모델인 원내정당모델과 비교함으

로써,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한다. 제Ⅲ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조직기반의 관점에서 경험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제Ⅳ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이념과 성과기반의 관점에서 경험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제Ⅴ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추후과제를 설정한다.

Ⅱ. 대중정당모델의 개념과 특징: 원내정당모델과의 차이성²⁾

그동안 학계는 한국 정당의 고질병으로 등장했었던 ‘정치머신’(political machine)³⁾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정당모델에 대해 논의해왔었다. ‘정치머신’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정당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큰 방향으로 볼 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모아지고 있다(박찬표 2002; 임성호 2003; 정진민 2003; 최장집 2005; 강원택 2007; 채진원 2009a; 채진원 2009b).

대중정당모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의자로는 최장집(2005)과 박찬표(2002)가 있으며, 원내정당모델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의자로는 임성호(2003)와 정진민(2003)이 있다. 임성호와 정진민은 정당이 이념성과 성과성이 강한 소수의 진성당원(기간당원)의 중심의 원내정당적 성격에서 벗어나 의원들의 자율성과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성(responsiveness)이 접합되는 원내정당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원내정당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핵심적인 개혁사항으로, ‘의

2) 일반적으로 대중정당모델과 대칭되는 모델은 간부정당이고, 원내정당모델과 대칭되는 모델은 원내정당모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적인 논쟁의 맥락에서 ‘정치머신’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두 모델의 이상형을 비교한다.

3) 정치머신의 보스들은 후보공천권과 정치자금분배권을 독점하여 의원들의 자율권을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을 특정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 사당화(私黨化)하였다. 특히, 보스의 지배하에 있는 ‘지구당’은 정당이 포방하는 가치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공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오직 특정 후보자의 선거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와 조직을 동원하는 고비용과 부패정치의 온상으로 작동해온 것도 사실이다(백창재 2002; 김용호 2004).

원의 자율성 확대'와 '의원총회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중앙당 축소', '지구당 개혁', '개방형국민경선제' 등을 제안한다.

하지만 대중정당모델을 강조하는 박찬표(2003)와 최장집(2007)은 앞에서 언급한 원내정당모델의 주장을 비판한다. 즉, 그들은 당원중심이 아닌 의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원내정당모델은 '정당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엘리

< 표 2 >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의 주요 특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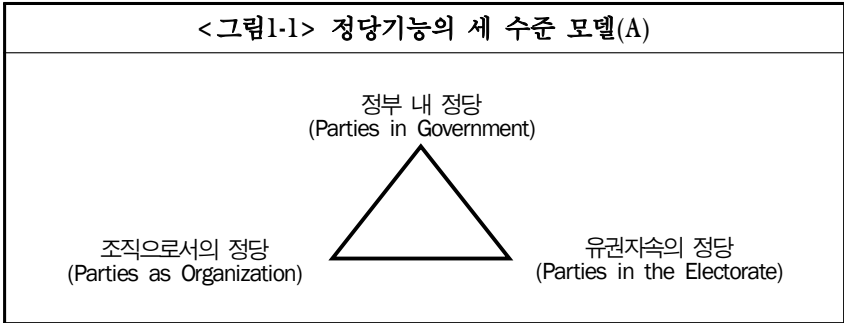
		대중정당모델	원내정당모델
기본개념	주요 행위자	• 이념적 활동당원(정파) 및 원외 중앙당조직	• 원내의원 및 원내정당조직
	조직 기반	• 당원중심 • 고정된 계급계층이나 지지기반이 있는 계급정당 + 이념정당 + 정파 정당 지향	• 당원 + 유권자/지지자중심 • 유동적인 유권자와 연계하는 '실용적 정책정당' + '유권자정당' 지향
전략개념	운영 방식	• 이익집성적 대의모델 (이익중심적: 고정된 이익을 갖는 이념적 정파원들간의 협상과 타협)	• 이익통합적 대의모델 (토의중심적: 유권자의 반응성에 민감한 의원들간의 대화와 토의)
	시민 사회 연계	• 경쟁관계: 정당과 시민사회의 경계가 겹침	• 분업적 협력관계 정당: 정책조정기능 + 공직자충원기능 시민단체: 이익집약기능
	당조직 관계	• 당원중심의 수직적 연결망	• 의원과 다양한 이슈쟁점과 관련된 일반 유권자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반응성	•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집중적으로 반응(고정적 관계)	• 지구화/후기산업화의 복잡하고 파편화되고 가변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유동적 관계)
	민주주의관	• 절차적 민주주의	• 토의민주주의
	의원상	• 대리인(delegate)	• 토의자(deliberator)

* 출처: 채진원(2009a,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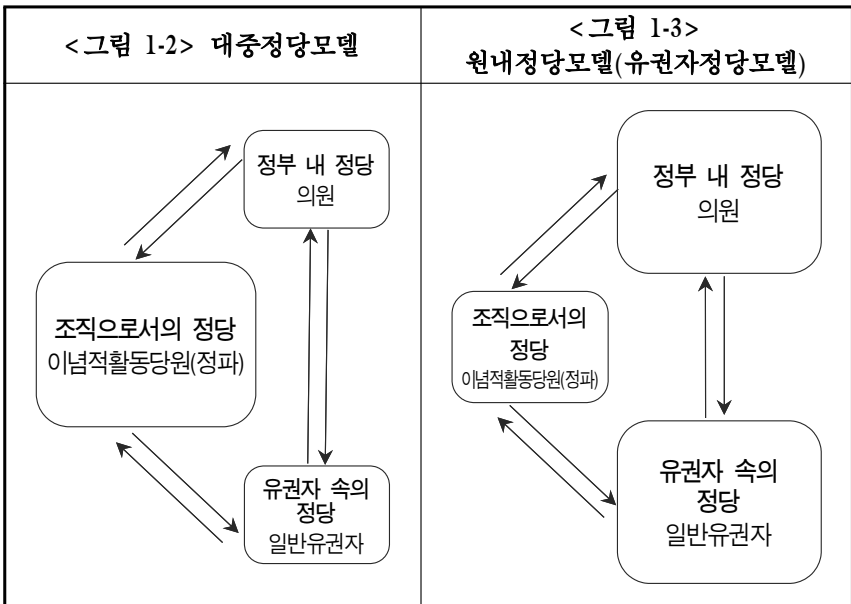
트정치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작동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사회의 계층적·계급적·이념적 균열을 이념적으로 조직화하여 동원할 수 있는 ‘대중정당모델’이 바람직한 대안모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당개혁의 방향으로 ‘진성당원제의 확대’와 ‘지구당 활성화’ 및 ‘이념적·계급적 정체성 강화’를 주장한다. 아울러 이들은 IMF 이후 한국적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것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이러한 대중정당모델의 사회적 기반을 넓혀줄 것이라고 인식한다.

두 모델의 주요 특징을 <표 2>와 같이 도식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 우선 정당의 조직적 기반에 대해 살펴본다면, 대중정당모델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하고 고정된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계급정당’과 ‘이념정당’ 및 ‘정파정당’을 지향한다. 반면, 원내정당모델은 고정적인 특정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보다 유동적인 일반유권자와 소통과 정책능력을 갖춘 의원들이 상호 네트워크할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정책정당’과 ‘유권자정당’을 지향한다(채진원 2009b, 268).

<표 2>와 같이 정당모델을 구분한 배경에는 정당 기능을 <그림 1-1>처럼 (1)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 PiE) (2)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 PiG) (3)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 PaO)이라는 세 수준 모델로 정리한 키이(Key 1964)의 선행연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1-2>와 <그림 1-3>처럼, 키이의 정당기능모델과 정진민과 임성호의 논의를 응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구체화하려는 채진원(2009a)의 비교논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키이의 논의를 분석틀로 응용하자면, 정당모델은 조직으로서의 정당(PaO)기능을 강조하는 대중정당모델과 유권자 속의 정당(PiE)기능과 정부 내 정당(PiG)기능의 연계를 강조하는 원내정당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설명지표로서, ‘조직으로서의 정당’ 성향이 강한 것이 대중정당모델의 일반적인 속성이란 점에서 그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조직기반’, ‘이념기반’, ‘정파기반’을 상징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인 당내 제도와 규범 및 조직기반의 행위자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 출처: 키이(1964)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2009a, 32).



* 출처: 채진원(2009a, 32).

Ⅲ. 민주노동당의 조직기반 정체성: 노동자계급정당

1. 창당과정과 조직기반

1) 창당과정: 민주노총의 주도성

<표3-1>처럼, 1995년에 민주노총이 조직의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권영길을 1997년 15대 대선후보로 추대하였다. 당시 권영길 후보의 선거조직이었던 ‘국민승리21’은 선거 이후에 ‘진보정당의 창당을 준비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환하였고, 3년 뒤엔 이 정치조직은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방침과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으로 창당되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창당세력은 ①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건설, ②투쟁 속에서 건설하고 대중 속에 성장하는 정당 건설, ③밑으로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체 당원들의 총의로 운영되는 정당 건설, ④폭넓은 민주 진보세력이 참여와 단결을 원동력으로 하는 정당 건설, ⑤국가경영을 책임질 대안정당, 정책정당 건설이라는 ‘5대 원칙’을 가지고 당 창당을 추진하였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창당은 그 이전의 진보정당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는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중조직이 아래로부터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고, 둘째는 당의 주요 노선으로 계급적 대중노선을 표방한 점이다(박상병 2007).

<표 3-1> 민주노동당 창당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주요 결정사항

일 시	내 용
1995. 11. 민주노총 창립대회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민주노총 강령 2항)

일 시	내 용
1996. 1. 중앙위원회, 2월 대의원대회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4.11 총선에 무소속의 독자후보를 낸다”(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1997. 3.27. 정기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1998년 지자체 선거 대거진출→1998~1999년 정당건설→2000년 국회 원내진출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의 사업을 힘차게 건설한다”(민주노총 2기 대의원대회 정치방침 결정사항).
1997. 7. 24.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제 민주세력과 함께 1997년 대선에 국민후보를 추대, 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키로 결의하였고, 9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후보로 추대하였다.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1998. 5.2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국민승리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임시대의원 대회 결정사항).
1999. 3.9~10.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서, 이에 동의하는 모든 변혁적 진보적 정치세력과 함께 1999년 4월 중에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추진기구(추진위원회 등)를 구성한다. 구체적 내용은 이후 국민승리21및 참여하는 제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추진기구 구성을 위해, 3월 14일 개최되는 ‘진보정당 창당 제안 2차 원탁회의’에 참여와,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제 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한다”(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 출처: 민주노총 각 년도 회의자료.

2) 조직기반: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총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추대하고, 선거운동조직으로 '국민승리21'을 조직하였다. 이후 국민승리21을 창당을 위한 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그 이후 2004년 17대 총선 전까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당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표3-2>처럼, 민주노총 조합원을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참여시키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직화시도는 총 당원 중에서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드러난다. 1998년도에 45.31%, 1999년에 50%로 최고치에 이르다가 그 이후부터 2004년까지 42%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1월~2월의 민주노총 당원 수는 16,512명으로, 각 연맹별 당원분포는 <표3-3>과 같다. 특히 <표3-4>처럼 당원들의 직업별 분포 추이는, 전체 당원 중 노동자(서비스직·사무직)·기능직/생사직·단순노무직 등의 비중이 60%내외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수치들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기반이 민주노총이고,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성격이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손색이 없다.

<표3-2> 민주노총 연도별 민주노동당 당원현황(1998~2004년 2월 현재)

연 도	98년 11월	99년 1월	00년 11월	01년 11월	02년 11월	03년 11월	04년 2월
민주노총 당원수(명)	600	3,261	5,409	7,622	10,872	14,816	16,512
총당원대비 구성비(%)	45.31%	50%	49%	48.29%	47.02%	43.63%	42.7%

* 출처: 민주노총, 2004, 『2004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해설집(2월)』 재구성.

<표3-3> 2004년 1월~2월 민주노총 당원 현황

구 분	04년 1월 당원수	04년 2월 당원수	증 가 율	구 성 비	당권자 수	당권자 비율
건설	578	582	0.7%	3.5%	237	40.7%
공공	3,058	3,218	5.2%	19.5%	2,007	62.4%
금속	5,523	5,730	3.7%	34.7%	3,546	61.9%

구 분	04년 1월 당원수	04년 2월 당원수	증 가 율	구 성 비	당권자 수	당권자 비율
대학	87	96	6.9%	0.6%	54	56.3%
버스	66	80	21.2%	0.5%	34	42.5%
택시	412	441	7.0%	2.7%	129	29.3%
보건	1,327	1,362	2.6%	8.3%	854	62.7%
사무	861	898	4.3%	5.4%	369	41.1%
서비스	323	326	0.9%	2.0%	194	59.5%
시설	31	31	0%	0.2%	14	45.2%
언론	119	125	5.0%	0.8%	62	49.6%
운송하역	218	263	20.6%	1.6%	125	47.5%
전교조	1,135	1,428	25.8%	8.7%	894	62.6%
화학	1,193	1,292	8.3%	7.8%	798	61.76%
지역	341	374	9.7%	2.3%	213	57.0%
기타	230	266	15.7%	1.4%	169	63.5%
총계	15,502	16,512	6.5%	100%	9,699	58.7%

* 출처: 민주노동당, 2004,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원회자료집(5.6)』.

< 표3-4 > 당원의 직업별 분포추이(2004.2~5)/단위(명, %)

	2월	3월	4월	5월
농업	1,003(3.0)	1,253(3.0)	1,366(3.0)	1,421(3.0)
자영업	1,641(4.0)	1,731(4.0)	1,982(4.0)	2,082(4.0)
서비스업	2,415(6.0)	2,752(6.0)	3,282(7.0)	3,498(7.0)
사무직	8,442(22.0)	9,519(22.0)	11,090(23.0)	1,679(23.0)
전문직	6,471(17.0)	7,249(17.0)	8,215(17.0)	8,472(16.0)
기능/생산직	9,779(25.0)	11,091(25.0)	11,960(24.0)	12,356(24.0)
단순노무직	325(1.0)	448(1.0)	678(1.0)	735(1.0)
전업주부	1,440(4.0)	1,554(4.0)	1,719(3.0)	1,830(4.0)
학생	4,563(12.0)	4,866(11.0)	5,263(11.0)	5,502(11.0)
무직	1,565(4.0)	1,768(4.0)	2,001(4.0)	2,282(4.0)
기타	1,137(3.0)	1,370(3.0)	1,684(3.0)	1,753(3.0)
전체	38,747(100.0)	43,601(100.0)	49,240(100.0)	51,610(100.0)

* 출처: 정영태(2004a).

2. 조직의 운영제도

1) 진성당원제도

진성당원제도는 일반적으로 소액의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원들에게 진성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당의 정책방향과 운영 그리고 정치자금 모금 및 후보자 공천 등 당내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진성당원제도는 민주노동당이 창당하기 이전 ‘국민승리21’에서부터 한 달에 1만원의 소액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당원을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정당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당의 운영과 정당의 활동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진성당원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대중정당(mass party)이다”(정영태 2004a, 33). 즉, 진성당원제도는 대중정당모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 표3-5 > 민주노동당 연도별 당원 수 증가

연도	증가수	누적 당원수
1998년	2,174	2,174
1999년	6,741	8,915
2000년	5,428	14,343
2001년	6,496	20,839
2002년	7,889	28,728
2003년	12,195	40,923
2004년	28,366	69,289
2005년	15,255	84,544
2006년	14,992	99,536
2007년	2,378	101,914
총계	-	101,914

* 출처: 민주노동당 보도자료(2007.5.3).

<표3-6> 정당별 당비납부 당원의 수(2004년/단위: 명)

	당원수	당비납부자수			당비납부자 비율(%)
		중앙당	시·도당	계	
열린우리당	276,269	30,406	47,291	77,697	28.1%
한나라당	1,086,329	2,638	1,197	3,835	0.35%
민주노동당	45,928	45,928	0	45,928	100.0%
새천년민주당	469,221	2,000	32,356	34,356	7.3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표3-7> 정당별 중앙당 수입대비 당비점유 비율(2000년/단위: 원, %)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전년도 이월	1,959,453,707(5.7%)	7,726,852,695(10.3%)	0
당 비	3,310,718,808(9.7%)	2,163,287,579(2.9%)	254,079,640(97%)
기탁금	444,250(0.001%)	377,560(0.0001%)	0
국고보조금	21,046,779,090(61.5%)	18,417,237,130(24.5%)	0
후원회 기부금	4,505,000,000(13.2%)	40,000,000,000(53.1%)	8,000,000(3%)
차입금	1,300,000,000(3.8%)	1,750,000,000(2.3%)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30,287,000(0.1%)	20,195,000(0.02%)	0
기타수입	2,047,327,578(6.0%)	5,168,481,990(6.9%)	0
합계	34,200,010,433(100%)	75,246,431,954(100%)	262,079,640(100%)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표3-5>처럼,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는 1998년 2천명 수준에서 2007년 5월 현재, 약 8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표3-6>처럼 민주노동당의 진상당원비율은 2004년 현재, 100%에 달해서 열린우리당(28.1%)과 한나라당(0.35%) 및 새천년민주당(7.32%)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표3-7>처럼, 민주노동당은 중앙당 총수입 중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기준으로 97%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9.7%)과 새천년민주당(2.9%)의 당비 점유비율이 대체로 10% 미만으로, 당 총수입중 상당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와 비교

해 볼 때,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당비납부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생성이 강한 정당으로 이해된다.

2) 중앙위원·대의원·최고위원회에서의 부문할당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진성당원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운영 제도가 '부문할당제도'이다. '부문할당제도'는 당의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출직의 1/2 범위 내에서 비선출 방식으로 노동,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의 부문 대표성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문할당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고, 주요선거에서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해 당의 인적·물적 토대로써, 민주노동당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급부(incentive)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노동부문 최고위원 1인에 대한 추천권'(실제로는 임명권), '노동할당부문 중앙위원'으로 전체 선출직 중앙위원의 28% 할당 특권, '노동할당 중앙대의원'으로 전체 선출직 중앙대의원의 28% 할당 특권을 민주노총에 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특권에도 전체 당원 중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의 비율을 4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철저히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지만, 모든 당원이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의원 선출, 중앙위원 선출, 중앙당 최고위원 선출에서 사회 각 부문별로 일정한 비율 또는 인원을 할당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주요 사회적 지지기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당 최고위원 13명 중 절반인 6명은 노동, 농민, 여성부문에 각각 1, 1, 4 명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당 대회 대의원과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위원도 각 부문별로 할당되는데, 2005년 2월 이전까지 노동 30%, 농민 30%, 빈민 3%, 학생 3%, 청년 여성 법조 학계 문화 예술, 보건의료 장애인 중소기업인 각각 1%씩 배정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주요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회집단의 이익이 당의 정책과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정영태 2004a, 35).

이 같은 부문할당제도는 <표3-8>처럼, 2005년 2월 이후에는 노동 28%, 농민 14%, 빈민과 학생 각각 2%,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여성, 청소년 각각 0.5% 그리고 환경, 법조, 문화예술, 보건의료는 각각 0.25%(최소배정)로 개정되었다. 특히, <표3-9>처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도 노동부문 할당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대의기관에서 노동할당비율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민주노동당의 전반적인 조직기반과 운영원리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자료 2007, 16-17).

<표3-8>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대의원 부문할당 비율 변화

부문	2000년 창당~ 2005년 2월 이전	2005년 2월 이후~ 2008년 2월 현재
노동	30%	28%(장애인할당5%포함)
농민	3%	14%(장애인할당5%포함)
빈민	3%	2%
학생	3%	2%
장애인	1%	0.5%
성소수자	-	0.5%
청년	1%	0.5%
여성	-	0.5%
청소년	1%	0.5%
환경	-	0.25%(최소배정)
법조	1%	0.25%(최소배정)
문화예술	1%	0.25%(최소배정)
보건의료	1%	0.25%(최소배정)
학계	1%	0.25%(최소배정)
중소상공인	1%	0.25%(최소배정)
총합	47%	50%

<표3-9> 민주노동당 지도부 중 노동부문 할당 변화

연도	2000~2004	2004~2008
내용	당 대표단 중 1인의 부대표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담당	당 최고위원회 13인 중 1인을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할당

3)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공직-당직 분리제도)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진성당원제도 만큼이나 중요한 제도가 ‘공직-당직의 겸직 금지제도’이다. 그렇다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왜 이 같은 제도를 당 규약으로 서둘러 제정하고, 이것을 강고하게 유지하려 했을까? 즉,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보수정당의 전반적인 추세는 원내정당화이다. 원내정당화의 핵심은 당을 의원 중심의 정당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며, 대중정당의 핵심은 대중들과의 사업을 통한 접촉과, 대중의 일상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대중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원내정당화는 민주노동당과는 인연이 없는 구상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에서 의원단은 당에 철저히 복속돼야 한다. 우리는 의원단이 당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임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원단은 당의 결정사항과 명령에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또한 의원단과 관련한 정책, 인적 역량, 재정 등은 당에 복속되어 당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민주노동당 당발전방향 및 제도개혁방안 보고, 2004).

“1) 당의 원내정당화(의회주의)를 막아내고, 원외의 당 조직과 평당원들이 굳건하게 당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 당 지역조직과 현장에서 성장하고 검증된 당 일꾼들을 정치지도자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 3) 대중투쟁과 사회운동 흐름을 당의 정치 활동과 적극적으로 소통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조직구조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민주노동당 당직제도개선보고서 2006, 7).

민주노동당에서 이 같은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화와 의회주의경향을 철저히 억제하고 배격하는 가운데, 대중정당모델의 전형으로 운영하면서 그 대중정당적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반납하고, 매달 받는 의원들의 세비를 노동자 평균 임금인 1백80만원만 수준으로 인하하는 ‘세비반납 및 환수’를 약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그 반납한 의원 세비를 당으로 환수하여 당 정책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의원보좌관 임면, 정책조정 등 추가적인 의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3-10>처럼, 2004년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가 조사한 이 제도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87%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2004년 5월 6일 중앙위원회에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공직-당직분리제)가 당규로 채택되기 직전 시기(2004. 4. 29~5. 3)에 조사한 것으로, 이 조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당원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4천7백42명이라는 상당수의 당원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당시 당 내 의견 분포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3-10> 공직-당직 분리제에 대한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공직-당직 분리제 반대	공직-당직분리제 취지 찬성(87.7%)		
10.8%	단, 일부 제한적 겸직 허용 (46.7%)		전면 실시 (41%)
	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겸직 허용 (20.7%)	대표 겸직 허용 (26%)	

* 출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2004, 『공직-당직분리제에 대한 여론조사』

위의 조사결과는 17대 총선 직후 시점에서 당원들의 87.7%가 대체로 공직-당직분리제의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정당 모델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3. 17대 총선에서 확대된 민주노동당의 지지층 사례

<표3-11>처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2004년 1월 17일에 3.5%에서 4월 13일 13.0%로 급상승하는 가운데,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의 정당득표율로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부상의 요인은 무엇일까? 그 요인은 무엇보다도 처음 실시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른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따로 분리해서 투표하는 이른바,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를 행했기 때문으로, 민주노동당이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강원택 2004).

<표3-11> 2004년 1월~4월 정당별 지지율 비교 추이(%)

	1/17	2/7	2/22	3/14	3/17	3/24	3/31	4/9	4/11	4/13	4/24
열린우리당	27.9	23.3	25.9	44.3	42.9	43.5	43.3	39.6	39.6	33.1	41.7
한나라당	17.1	16.8	13.7	13.1	16.0	18.9	22.8	25.5	25.9	24.4	24.6
민주노동당	3.5	3.5	5.1	4.6	3.4	4.8	6.9	9.1	13.4	13.0	17.9
민주당	13.0	9.5	9.1	4.7	4.5	3.8	3.6	5.8	5.1	6.6	2.6
자민련	1.1	1.3	1.1	1.7	0.8	0.8	0.7	0.8	1.5	1.5	0.4
기타정파	0.6	0.4	1.9	0.7	0.6	0.5	0.2	0.4	1.3	0.9	0.1
무당파	36.8	45.2	43.2	30.9	31.8	27.7	22.5	18.8	13.2	20.5	12.7

* 출처: 민주노동당, 2004,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자료집(5.6)』.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지역구투표에서 사표심리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던 후보나 정당에 대한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의석은 2석에 불과하지만, 비례대표의석 8석을 얻음으로써, 10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유권자들의 '분할투표행태'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을 2002년 16대 대선의 3.9%로부터 17대 총선의 13%까지 확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정영태(2004b), 조돈문

(2004) 두 선행연구자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영태(2004b)에 의하면, 2004년 17대 총선의 정당명부비례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연령(세대), 교육수준, 계급적 지위, 소득수준은 <표3-12>

<표3-12> 사회배경변수별 투표정당 - 세대, 학력, 계급적 지위, 소득수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민주 노동당	기타 정당	합계
세 대	전전세대	47.5	11.3	32.4	3.4	4.9	0.5	100.0(204)
	민주화세대	43.7	4.7	37.5	1.5	11.5	1.2	100.0(339)
	386세대	22.1	6.0	54.2	0.3	15.8	1.6	100.0(367)
	e세대	17.6	4.9	57.4	0.5	18.1	1.5	100.0(204)
학 력	초등졸이하	35.1	9.1	42.9	6.5	6.5	0.0	100.0(77)
	고퇴이하	40.7	9.3	37.4	1.7	7.6	3.4	100.0(118)
	대퇴이하	32.6	6.1	44.1	1.1	15.1	1.0	100.0(524)
	대졸이상	28.2	5.6	51.5	0.3	13.2	1.1	100.0(355)
계 급 / 층	자본가	20.0	30.0	50.0	0.0	0.0	0.0	100.0(10)
	신중간	24.4	7.3	43.9	0.0	24.4	0.0	100.0(41)
	구중간	40.2	5.7	41.4	1.1	10.3	1.1	100.0(174)
	농민	53.3	0.0	26.7	6.7	13.3	0.0	100.0(15)
	화이트칼라	34.2	3.8	44.3	1.3	16.5	0.0	100.0(41)
	블루칼라	27.0	9.5	50.8	0.0	12.7	0.0	100.0(63)
	주부	39.0	4.6	44.5	1.8	7.8	2.3	100.0(218)
	학생	19.6	4.7	47.7	0.9	24.3	2.8	100.0(107)
	무직	26.3	8.4	54.7	3.2	6.3	1.1	100.0(95)
소 득 수 준	하위20%미만	26.3	7.9	51.8	2.6	9.6	1.8	100.0(114)
	하위20~40%	35.2	7.2	41.9	1.3	13.6	0.8	100.0(236)
	하위40~60%	30.2	6.8	47.8	1.6	11.5	2.1	100.0(381)
	하위60~80%	33.3	5.3	41.5	0.6	18.7	0.6	100.0(171)
	상위20%이상	14.3	14.3	71.4	0.0	0.0	0.0	100.0(7)

*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4.4), 정영태(2004b) 재인용.

와 같다. 세대별로는 386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주화세대와 e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전세대의 비중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 학력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유권자들이다. 계급(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교차하여 재구성)으로는 학생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구중간층과 주부, 그리고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신중간층 등의 순이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비중은 적어 전체 지지자 중 약 13%에 해당된다. 하지만 화이트칼라는 17% 가까이 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은 하위 20%~40%에서부터 하위 40~60%까지 약 44% 가량이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이 분할투표의 효과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 또한 조돈문(2004)에 의하면, 2004년 17대 총선 시 한국 갤럽(gallup)의 출구조사데이터는 <표3-13>과 <표3-14>와 같다. <표3-13>에서 보듯이, '정당별 비례투표'에서 "만약 투표하신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노동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며, 한나라당은 1/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정당을 합하면 민주노동당은 44.8%를 획득하여 56.4%를 획득한 열린우리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41.2%의 한나라당을 앞서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큰 규모의 잠재적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직업별 투표성향을 보면 <표3-14>과 같이, 화이트칼라는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높은 민주노동당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블루칼라는 화이트칼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타 직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노동당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 역시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이 분할투표효과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층'에서부터 '화이트칼라'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지층에서 고학력, 고소득, 학생층 등 중산층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표3-13>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 및 2순위 정당(%) (2004.4.15 조사)

	비례대표 투표	2순위 선호 정당	합계
한나라당	33.0	8.2	41.2
민주당	5.8	9.2	15.0
열린우리당	38.8	16.6	56.4
자민련	2.1	2.3	4.4
민주노동당	15.5	29.3	44.8
기타정당	1.6	2.5	4.1
비공개/모름, 없음, 무응답	3.2	31.8	35.0
합계	100.0	100.0	200.0

* 출처: 한국갤럽(2004), 조돈문(2004)에서 재인용.

<표3-14> 직업별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투표(%) (2004.4.15 조사)

	민주노동당 투표	2순위 선호 정당	합계	지역구 투표
농, 임, 어업	10.7	18.8	29.5	3.2
자영업	12.6	31.6	44.2	1.3
블루칼라	13.7	28.7	42.4	5.4
화이트칼라	23.0	34.7	57.7	7.0
가정주부	11.8	26.4	38.2	3.0
학생	14.3	36.2	50.5	5.4
무직	16.0	19.8	35.8	6.6
전체 평균	15.5	29.3	44.8	4.6

* 출처: 한국갤럽(2004), 조돈문(2004)에서 재인용.

IV. 민주노동당의 이념·정파기반 정체성: 사회주의정당

1. 이념기반

민주노동당은 『당헌』에서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민주노동당 2004, 21)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표4-1>처럼, 민주노동당은 『창당선언문』에서 “지난 세기는 민중이 배제된 소수 특권층의 정치, 시장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풍요와 다수의 빈곤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이 만들어 나갈 새천년은 민중 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를 통하여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다”(민주노동당 2004, 13)라고 밝힘으로써, ‘민중 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라는 명제로 자신의 정치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표4-1> 민주노동당 창당선언문과 강령 일부

※ 민주노동당 창당 선언문(2000년 1월)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고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장악되지 않는 평등사회, 개인의 창조성과 성과를 존중하면서도 제도화된 인간과 인간의 차별을 극복하는 평등사회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이다.”

※ 민주노동당 강령(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 의료 주거 통신 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도록 한다. 지난 날 국가사회주의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중주체의 정치’와 ‘민주적 경제체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강령-정치』에서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민주노동당 2004, 170). 『강령-경제』에서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민주노동당 2004, 170)고 부가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강령-전문』은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함과,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를 통해, 비록 명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회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를 자신의 지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민주노동당 2004, 18)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협의의 개념으로서 현존하는 특정한 사회주의이념보다는 이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해방공동체’의 구체적인 상은 『강령-경제』에서 잘 드러난다.

『강령-경제』에서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민주노동당 2004, 173)고 밝히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사회적 소유’와 ‘시장’이 병립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민주노동당의 이념 정체성은 ‘사회주의적 체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민주노동당에게 ‘이념’은 추구하는 목표이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강력한 정당성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다른 당과 차별성을 갖는 중요한 요소이다.

2. 정파기반

정파(faction)는 노동자계급을 조직적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정당 내부의 또 다른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당의 조직적 기반과 이념을 연결시키는 행위자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내에서 정파의 주요 기능은 ①당이 결정해야 할 각종 노선(이념, 정치, 정책, 조직 등)에 대한 의견표출과 입장제시 기능, ②당원들의 의견과 입장 집약, ③당직과 공직선출에 대한 엘리트 층원, ④선출된 당직 및 공직자 통제기능 ⑤각종 선거 시 당원 조직화 및 동원 기능 등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정파의 기능은 순기능만이 아니라 2007년 대선패배 이후 ‘분당의 한 요인으로 드러난 것처럼, ‘정파갈등’과 ‘당심-민심의 외면’ 및 ‘정파 패권주의’라는 역기능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정파(faction)는 2000년 창당 이전시기와 그 창당과정에서 노동계, 농민계, 빈민계, 진보 정치운동계, 여성계, 학계, 학생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여 당의 기본노선(당 이념과 정책)을 정하고 당 발전전략에 관한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당내의 주요한 정파구도와 지형은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요 세력이자 당원층원의 조직적 기반이 민주노총이었던 이유로, 크게 민

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정파질서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에 기반하고 있는 정파구조에 다른 정파들이 연합되거나 또는 이것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파가 형성되기도 한다.

1) 민주노총내의 정파구도

<표4-2>처럼, 민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3대 정파는 ‘국민파’, ‘중양파’, ‘현장파’이다. 먼저, 1980년대 운동권의 민족해방(NL)노선에 뿌리를 둔 국민파는 노동운동이 사회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리적 조합주의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교섭 등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중시한다. 자연히 성향도 온건하다. 전체 조합원의 40%가량이 국민파로 분류되는데, 이수호 전임 위원장과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강승규 전 부위원장 등이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국민파의 대척점에 자리한 것이 중양파

<표4-2> 민주노총내 3대 정파

	국민파(NL계)	중양파(PD계)	현장파(PD계)
노동운동 노선	실리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	긍정적	전술적 이용	부정적
현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입장	대체로 찬성	반대	반대
정치적 입장	노무현 정권 지지+ 민주노동당 지지	민주노동당 지지	민주노동당에 비판적
주요 산하 단체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공공연맹, 금속연맹	전해투
전임 위원장 및 정치인	권영길(1대·국회의원), 이수호(5대), 이석행(6대)	단병호(3대·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이갑용(2대·울산동구청장), 유덕상(4대)

* 출처: 김진수(2004) 일부인용.

와 현장파다. 언론에선 흔히 이 두 정파를 묶어 편의상 '범좌파'로 칭하면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로 분류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두 정파 사이엔 적잖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이들이 범좌파로 연대한 것은 2002년 8월, 구속된 단병호 위원장 후임으로 유덕상 당시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할 때뿐이며,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과 운동노선이 다르다. 두 정파 모두 노사관계를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긴 하지만, 중앙파는 현장파보다 덜 강경하다. 국민파와 마찬가지로 전체 조합원의 40%가량을 점하는 중앙파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민중민주(PD)노선을 취하며, 사회적 교섭이 시기상조라고 여긴다. 중앙파 내부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연합(전국노동조합협의회)시절부터 중앙조직에서 활동한 이들이 많다. 대표적 인물은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심상정 의원이다(김진수 2004).

2) 민주노동당 정파구도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8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는데, 국회의원들을 정파성향별로 분류해보면 <표4.3>과 같다. 먼저 민중민주(PD)계열로는 노회찬, 조승수, 심상정, 단병호가 있으며, 민족해방(NL)계열로는 권영길, 천영세, 최순영,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가 있으며, 그 비율은 4:6(PD: NL)로 나타난다. 또한 순수하게 민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정파별로 보면 중앙파(PD)계열로는 단병호, 심상정이 있고, 국민파(NL)계열로는 권영길, 최순영, 천영세가 있으며, 그 비율은 2:3으로 나타난다. 또한 민주노총내부에 존재하는 비민주노총적인 정파별로 보면 좌파(PD)계열로는 노회찬, 조승수가 있고, 전국연합(NL)계열로는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가 있으며, 그 비율은 2:3이다. 그리고 원외지도부를 정파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좌파(PD계)계열로는 김혜경, 주대환, 김종철이 있고, 전국연합파(NL계)이면서 비민주노총성향의 최고위원으로는 김창현, 김미희, 이정미, 유선희, 최규엽, 하연호가 있으며, 그 비율은 1:2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민주노총 내에 존재하는 정파별로 보면 중앙파(PD)계열로는 0명이며, 국민파(NL) 계열로는 박인숙, 이영희, 이용식이 있으며, 그 비율은 0:3이다. 아울러 10명의 원외지도부를 이념성향별로 환원해보면, PD계열은 김혜경, 주

대환, 김종철이 있고, NL계열로는 김창현, 김미희, 이정미, 유선희, 최규엽, 하연호, 박인숙, 이영희, 이용식이 있으며, 그 비율은 1:3이다.

<표4-3>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원내외 지도부의 정파별 분류

구분	전국연합파(NL계)	좌파(PD계)	중앙파(PD계)	국민파(NL계)
국회 의원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	노회찬, 조승수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의원단대표), 권영길, 최순영
최고 위원	김창현(사무총장) 김미희 · 이정미 · 유선희(여성부문) 최규엽(일반부문) 하연호(농민부문)	김혜경(당 대표) 주대환(정책위의장) 김종철(일반부문)	-	박인숙(여성부문) 이영희(일반부문) 이용식(노동부문)

* 출처: 김진수(2004) 일부인용.

3)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시의 주요 정파들의 영향력

정파의 여러 기능 중에서 ‘정파의 존립 및 유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직과 공직선출시의 엘리트 충원’과 ‘선출된 당직자와 공직자의 통제기능’이다. 왜냐하면, 정파의 존립이유는 정당의 일반적 목적과 마찬가지로, 당직과 공직이라는 권력의 획득과정과 정책의 실현과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민주노동당 내부에 존재하는 주요 정파인 전국연합파(NL계)와 좌파(PD계)가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선출과정에서 어떠한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경선 과정에서 각 정파그룹의 후보선택과 정파간 연합은 중요하였다. 당내경선의 결과는 <표4-4>와 같다.

당내 경선 당시, 투표권을 가진 당원자는 22,525명이고 투표율은 60.6%였다. 실제 투표한 사람이 13,63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승패의 핵심 관건은 ‘정파조직력’이었다. 결국 두 가지, 정파의 조직적 지원과 일반당원의 정서상의 지지, 이 양자를 모두 얻어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정용상 2005). 민주노동당내 존재하는 민중민주(PD)계열과 민족해방(NL)계열 정파들이

<표4-4> 17대 총선시 비례대표후보 당내경선 결과

일반명부	득표수	비례대표 순 위	여성명부	득표수	비례대표 순 위
기호 1번 천영세	5,052명	4번	기호 2번 현애자	3,339명	7번
기호 2번 노회찬	3,048명	8번	기호 3번 김미경	618명	
기호 3번 정태홍	505명		기호 4번 심상정	6,046명	1번
기호 4번 김석진	880명		기호 5번 이영순	5,343명	3번
기호 5번 김병일	495명		기호 6번 송경아	1,258명	
기호 6번 남만진	411명		기호 7번 이주희	3,163명	
기호 7번 이문옥	2,549명		기호 8번 최순영	3,903명	5번
기호 8번 이선근	459명		기호 9번 석윤수경	1,043명	
기호 9번 장봉주	100명		기호 10번 이정미	929명	
기호 10번 강기갑	5,031명	6번			
기호 11번 단병호	7,225명	2번			

공직선출과정에서 어떠한 조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노동전문일간지인 『매일노동뉴스』의 인터넷판인 『레이버 투데이』에 정용상 기자가 보도했던 ‘기획연재: 민주노동당, 2004년 2월~2005년 4월 ④申’에서 잘 드러난다.

“같은 날 밤, ‘17인 모임’(정파대표자모임: 연구자삽입)이 대구에서 열려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누구를 조직적으로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단병호 전 위원장과 심상정 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지지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터였기 때문에, 이날의 쟁점은 노회찬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지후보로 결정할지 말지였다. 민주노총 ‘중양파’와 ‘진정추’ 쪽은 단병호, 심상정, 노회찬 이렇게 3명을 지지후보로 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이에 대해 ‘화요모임’ 쪽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시 ‘화요모임’ 쪽에서는 지난해 10월 중양위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계승’에 대한 안전 처리과정에서 노회찬 총장은 좌파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면서 ‘실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추’(노회찬 의원은

진정추 활동을 했었다)쪽과 ‘중앙파’ 쪽 사람들이 중재 노력을 했지만 무산되고, ‘화요모임’은 급기야는 ‘포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좌파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동안 당내 ‘자민통’ 계열, 당시 민주노총 새 지도부를 꾸리고 있던 국민파 등에서도 후보자들끼리 연대전선이 꾸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범좌파처럼 ‘테이블 논의’ 수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시점 또한 좌파의 논의시점이 2월20일 중앙위 이전이라면, 자민통-국민파쪽은 후보등록 다음인 3월초에 선거연합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중앙위 이전까지 후보로 나설 것이 확실했던 사람은 이영순 후보밖에 없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당연한 것이다. 자민통과 민주노총 국민파쪽에서는 일반명부에서 천영세, 강기갑 후보를, 여성명부에서는 이영순 후보와 함께 최순영, 현애자, 이주희 후보 등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묶음은 ‘강력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 정황과 조건에서 나타난다. 각 후보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정파그룹 사이에 ‘거래할 꺼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용상 기자의 심층취재보도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주요 정파들이 독자적인 이념(신념체계)과 위계적인 조직구도 및 기율체계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당원들에게 ‘정파투표’를 유도해왔다는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정파들이 당의 의사결정과정과 각종 선거 및 엘리트 총원과정을 지배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비례대표 후보선거에 대한 당내 경선과정에 당내 유력한 정파들이 개입했고, 그 결과 실재적인 영향력이 발휘되었으며, 사실상 정파들의 영향력에 의한 ‘정파투표’가 작동되어 ‘비례대표후보’가 결정되었음을 확인 해준다.

V. 결론

본 논문은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사회주의적 강령을 삭제하고 자유주의적 이

념성향을 지닌 국민참여당과 합당하고 19대 총선에서 경남과 울산 등 노동자 밀집지역의 패배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됨으로써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주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려고 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이 추구했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문제제기하고 이것을 대중정당모델의 경험적 지표인 제도와 규범 및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 논문의 논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중정당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적 이념 및 정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규범 및 조직적 행위자를 통해 꾸준히 작동시켜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대중조직이 창당과 조직의 확대를 주도하게 한 점이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조합원들을 진성당원으로 조직해오면서, 당원이 당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진성당원제'와 '부문할당제도'를 운영해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항상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원내정당화와 의회주의 경향을 반대하고, 의원중심이 아닌 당원중심의 이념과 계급을 중시하는 대중정당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를 운영해왔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성향의 '이념정당'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이념정당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조직하기 위한 당 내부의 중요한 행위자들로 '정파'(faction)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파정당'을 추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민주노동당 정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새롭게 소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또한 상술한 논문의 목적과 한계에서 밝혔듯이, 당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예비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민주노동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정당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여 정당연구의 지평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다 문제제기 했다는 데 소박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드러난 민주노동당의 모습을 당 내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규범 및 조직적 특성을 보여주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고 그것의 가치를 변화이전의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후 당 정체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과 근거의 잣대를 명료하게 제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매우 단기적인 시각에서 주요한 정당모델에 대한 분석들을 가지지 않고, 주요한 정치적 사건과 사건사를 중심으로 분석된 것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당모델을 정당기능의 비중에 따라 (1)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 PiE), (2)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 PiG), (3)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 PaO)이라는 세 수준 모델로 정리한 키(Key 1964)의 선행연구를 수용하여 대중정당모델의 특징을 모델화하여 민주노동당이 만들고자 했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점이다. 이러한 평가 작업이 있는 후에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비교학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풍부하게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 논문 접수일 : 2013년 04월 05일
- ▶ 논문 심사일 : 2013년 04월 29일
- ▶ 논문 게재일 : 2013년 05월 10일

초록

민주노동당(1997-2004)이 추구했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

채진원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주의적 강령을 삭제하고 자유주의 이념성향의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였다. 이런 조치는 지난 17대 총선을 전후로 하여 급격하게 쇠락하는 당의 모습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쇠락과 변화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대중정당모델을 상정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약화에 따른 당의 성격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먼저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려고 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이 만들고자 했던 정체성이 무엇이었나를 문제제기하고, 이것을 대중정당모델의 관점에 입각하여 경험적인 설명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1997년부터 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 이전까지 민주노동당의 대중정당적 특징이 비교적 잘 드러난 만큼, 이 시기에 초점을 맞춰 당의 정체성을 조직·이념·정파기반에 입각한 경험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정당, 민주노동당, 대중정당모델, 원내정당모델, 조직, 이념, 정파

Abstract

What Did Democratic Labor Party(1997-2004) Do to Form Its Own Identity?

Chae, Chin Weon

Recently,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KDLP) abolished his socialist code. It is interpreted as an effort to reverse the decline of the party's influence. KDLP shows the sharpest decline after 17th Parliamentary elections. It shows to be confused in many ways for the peoples come to consider Mass Party Model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problem of political machine. In this paper, I shall attempt to explain th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KDLP as a mass party model based on comprehensive and empirical indexes,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hanging nature of KDLP.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ress the party's nature of the certain period, when KDLP still displayed its original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from 1997 to 2005 until the by-election in Buku Ulsan.

□ Key words : Political Party,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Mass Party Model, Inner-Parliamentary Party Model, Ideology, Fraction

참고문헌

- 강원택. 2004.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집 제2호.
- _____. 2007. “민주화 20년의 정당 정치: 평가와 과제.” 『경제와 사회』 제74호.
- 김보연. 2008. “한국 진보정당의 내부정치: ‘연대의 결여’와 ‘지체된 성장.’” 『지역과 전망』 통권 제18호.
- 김수진. 2008.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명지대학교 개교 60주년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자료집(9.21).
- 김용호. “머신정당당과 대중정당.” 『내일신문』 신문로칼럼(2004.10.19).
- 김윤철. 2010. 『민주노동당 침체의 동학: 리더십 제약에 따른 당 혁신과 갈등관리의 실패』.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진수. 2004. “민주노동당 정파갈등.” 『신동아』 통권 53호.
- 류중희. 2004. “민주노동당 첫 정책협의회-민주노총과 이견도 노출.” 『프로메테우스』.
-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2004, 『공직-당직분리제에 대한 여론조사』.
- 민주노동당. 2003. 『민주노동당 당 발전방향 및 제도개혁방안 보고』.
- _____. 2004.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원회자료집(5.6)』.
- _____. 2004. 『사랑해요! 민주노동당: 신입당원을 위한 길라잡이』.
- _____. 2006. 『민주노동당 당직제도개선보고서』.
- _____. 2007. 『민주노동당 연도별 당원 수 증가』.
- _____. 2007. 『2007 제6차 중앙위원회 회의 자료집』.
- 민주노총. 2004. 『2004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해설집(2월)』.
- 박상병. 2007.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운동.” 정해구 외.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서울: 한울.
- 박찬표. 2002. “한국 정당민주화의 과제: ‘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정당의 민주화 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 백창재. 2002. “미국의 ‘정당머신’.” 『한국경제신문』 시론(7.17).

- 임성호. 2003.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 『의정연구』 제9권 제1호.
- 정영태. 2004a.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노사관계의 전망.” 미발표원고(7월).
- _____. 2004b. “진보정당의 성공과 향후 과제.” <한국선거연구회> 2004년 연례학술회의 (2004. 7. 2) 원고.
- 정용상. 2005. “민주노동당. 2004년 2월~2005년 4월 ④정파. 움직이기 시작하다.” 『매일노동뉴스』 <기획연재>(9.30).
- 정진민. 2003. “정당개혁의 방향: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2호.
- _____. 2005. “지구당폐지 이후의 새로운 정당구조와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범위.” 『의정 연구』 제11권 제1호.
- 조돈문. 2004.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5.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200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 채진원. 2009a.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 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b. “민주노동당의 변화: 원내정당화 현상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27호).
- 최장집. 2005.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서울: 후마니타스.
- Key, V. O. 1964.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